

북한의 농업 현황과 식량 수급사정

요 약

발표자 : 김운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북한 농업은 1946년 토지개혁과 1958년 농업협동화를 통해서 사회주의체제의 전형인 농업형태로 발전하였다. 해방이후 비교적 정황히 발표되어 온 모든 통계수치는 1963년부터는 은폐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 실정을 세밀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남한에 비해 농지가 부족한데 자연조건까지 불리하여 모든 역량을 식량증산에 역점을 두고 간석지 개간과 새땅찾기운동 등 농지 확장정책과 관개시설 등 농지기반 시설투자에 집중하였다. 이와 함께 해방당시까지 재배되어 온 잠곡위주의 생산패턴도 대부분 옥수수 재배로 크게 변모하였다.

논에는 벼를, 밭에는 거의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이들 育種水準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농업연구인력도 남한에 비해 두배나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결과가 실제로 농촌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金日成의 “主體農法”과 농촌 현지답사를 통한 敎示가 북한의 농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험장의 연구결과나 이론적 배경이 없이 막연히 농촌 현장지도에서 언급된 말이 북한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수정을 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하나의 헌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체농법의 대표적인 것이 密植栽培와 다락밭 건설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의 식량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고 1989년부터 최근까지는 매년 200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소요량은 약 600~650만톤으로 추정되며 현재 생산량은 400~450만톤이다. 식량 수급사정을 판단하는 데는 연구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93년부터 북한 인접 중국지역의 훈춘, 도문, 연변, 집안, 장백현, 단둥 등 6개 지역의 작황조사와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휴전선지역의 파주, 연천, 양구, 화천, 고성 등 여러지역의 작황과 기상분석, 그리고 북한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북 품종의 남한지역내 재배결과와 집단농장과 개인농과의 생산력차이, 그리고 냉해, 병충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북한 식량수요량은 북한의 농업수준이 남한의 1960년대 수준으로 보고 이 당시의 남한의 1인당 식량소비량을 인구에 적용, 추정하고 사료곡물 소요량은 북한의 1인당 유류소비량에 톤당 축종별 사료 소요량을 유추하였고 종자, 가공, 감모 등도 남한의 생산량에 따른 소요비율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부족한 곡물 200만톤 조달은 약 100만톤은 저축미, 애국미 그리고 하루 3끼 배급량을 두 끼로 줄이면서 절약을 통하여 해결하고 나머지 100만톤은 수입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이 부족한 원인은 그 첫째가 집단농장에서 오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이고 두번째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부족 등이다. 그외에도 밀식재배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자연조건 불리함, 집단농장의 소농식 경영 등이다.

앞으로의 북한의 식량해결은 무엇보다도 집단농장에서 탈피하여 중국처럼 개별농가에게 농지의 이용권을 주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아울러 북한 농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金日成 생전의 어둠 타파도 북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북한 경제가 과거 구소련이나 동독 등 동구권 국가와 중국 등이 개방 내지는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면서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소원해지면서 더욱 어렵게 되고 뒤따라 농업문제도 후퇴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은 오로지 개혁·개방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이러한 해결에 따라 자연히 북한 농업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